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음 11월 11일) 제21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쟁점 - ② 불거지는 특혜 논란

자광 측 대한방직 부지 절차 무시한 일방통행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143층 타워와 아파트 단지 등을 복합 개발하려는 계획에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각종 특혜, 사업 추진에 강한 의문과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쟁점사항을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용도별 부담률 개선표〉

구분	기준 면적(㎡)	부담면적(㎡)	부담률(%)
전용 주거	1,061,188.6	27,142.1	2.6
일반 주거	1,061,188.6	522,515.5	49.2
준 주거	198,914.0	136,255.3	68.5
상업 용지	360,304.0	271,408.8	75.3
합계	1,620,406.6	957,321.7	59.1

‘기부채납’ 형평성에 맞게 더 높아야 ‘도유지’ 용도 변경 원칙 지켜야

1,400여 평의 상업용지를 환지로 적용한 바 있다. 도시개발법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엔 ‘환지계획구역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지정권자(시장 등)가 인정한 경우 60%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80% 이상은 꽤야 한다”며 “자광 측 16.9%기부채납비율은 기존 상업지역 토지주들 감보율의 1/5수준에 불과한 엄청난 특혜”이라고 말했다.

▲문제 핵심은 ‘도유지’, 용도 바꾸려면 관련 절차 밟아야
특혜논란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밟아야 될 행정 절차가 많고도 험난하다.

이번 개발 사업이 전국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한 심의와 각종 평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주거용지)와 도시관리계획(일반공업지역)으로 고정돼 있다.

자광은 이런 해당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143층 초고층타워와 호텔,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27일 자광은 전주시에 대한방직 이전과 철거공사를 대비하기 위한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공작물 축조 신고를 접수했다. <2면에 계속> /고민형 기자

글 쓰는 순서

- 1. 개발 절차 정당성부터 확보
- 2. 불거지는 특혜 논란
- 3. 인터뷰 - (주)자광

▲끊이지 않는 ‘특혜’와 ‘형평성’ 논란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23만565㎡ 중 83.1%인 19만1,550㎡를 개발하고 남은 부지 3만9,015㎡(16.9%)에 컨벤션센터와 문화공원을 조성한 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비교해 기부채납비율이 낮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주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진행된 용도별 부담률(기부채납 비율)은 전용주거의 경우 2.6%, 일반주거 49.2%, 준주거 68.5%였다.

이 가운데 상업용지 부담률은 75.3%였으며, 심지어 당시 대한방직 조차 79.89%에 이르는 감보율로

특히 ‘환지 계획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할 경우 60%를 초과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이 관련법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광측이 제시한 기부채납 비율이 16.9%가 아닌 서부신시가지 상업용지 부담률인 75%대는 유지돼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다.

민약 전주시가 자광 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서부신시가지 기부채납 토지주들의 대규모 환급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라도 기부채납 비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면제해야”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면제 촉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결정

설문 응답자 91.7%가 ‘찬성’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3면>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

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공립유치원 모집과정 개선돼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불편 가중

“차라리 사립유치원에 보내겠다” 학부모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선모집 자격기준이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자녀들을 먼저 선발하다보니 일반 가정 학부모들은 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순위에 밀려 ‘그림의 떡’이다.

전주에 사는 김모씨는 “집 근처에 있는 공립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처음학교로’에 가고싶은 유치원에 등록 후 우선선발에 밀려 대기자 순번으로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건지 답답하다”며 하소연 했다.

또한 “병설유치원 3~5세 혼합연령 반으로 보내면 지원도 많고 학급반 수도 줄어 혜택이 있다지만 어린 나이에 선배들에게 기죽고 보내는 건 싫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시 인근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병설유치원 1~2학급을 증설한다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원 대상 학생모집으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제시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유아교육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내 모 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립유치원 증설만 주장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http://www.jangsu.go.kr
장수군 대표전화 063)351-2141

자연이 주는 휴식처, 힐링의 시작!

낭만적인 장소가 가득한 장수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힐찬 장수



장안산국립공원



튼뽕샘생태공원



장수농개생가



승마레저파크



장수의암공원



장수천천면남양리